

‘트럼프 2028’을 보며 꼬리를 문 불길한 생각

태평로

임민혁

국세부장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3선 도전’을 갖고 장난치듯 하는 모습을 보며 참 트럼프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트럼프 2028, YES’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올리는가 하면, 야당 지도부와 담판을 벌일 때는 책상 위에 ‘트럼프 2028’이 적힌 포자를 잘 보이게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 2028년은 다음 대선이 열리는 해다. 미 헌법은 ‘누구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백히 헌법 취지에 반하는 이런 게시물을 극성 지지자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퍼뜨렸다.

트럼프는 분명 전례 없는 파격의 대통령이지만, 그가 진짜로 대통령을 더 하려는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과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테고, 트럼프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틈만 나면 3선 뺨박을 던지는 것은, 최대한 임기 말까지 권력 누수를 늦추고 정국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일 것이다. 사람들 마음 한구석에 “혹시 트럼프라면…”이라는 의구심만 들

게 할 수 있다면 나름 성공이다.

‘레이덕’은 임기제 지도자의 숙명 같은 것이다. 특히 미국 정치에서는 재선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차기 대선 정국이 펼쳐진다. 더 줄마를 못 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례적으로 임기 말에 지지율 반등을 이뤄냈던 오바마도 중간선거 직후에는 레이덕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초청 행사에 불참하고, 오바마가 반대하는 법안에 여당 수십 명이 찬성표

권력 누수 참지 못하는 트럼프 ‘싱가포르의 추억’ 재소환할 듯 달라진 위상의 김정은 앞에서 韓 안보 뒷전인 거러 벌일 수도

를 던지고, 주요 방송사가 오바마 특별 연설 생중계를 거부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트럼프는 이런 관심의 공백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해야 성에 차는 스타 일이다.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에 그는 계속 3선에 모호함을 남겨두는 한편, 관심을 본인에게 불잡아둘 수 있는 정책·이벤트를 모색할 것이다. 그 최우선 카드 중 하나는 높은 확률로 ‘북한 김정은’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1기 때 그를 보좌한 외교관은 “트럼프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김정은과

만났을 때처럼 세계에서 많은 취재진이 몰린 이벤트는 없었다. 당시 셀 수도 없던 카메라는 트럼프 뇌리에 깊이 각인돼 있다”고 했다. 이런 매력적인 카드를 왜 묵혀 두겠는가.

지난주 발표된 미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핵’ 단어가 아예 사라졌지만, 트럼프가 흥미를 잃은 것은 난해하고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북핵 문제’이지 ‘김정은’이 아니다. 김정은과의 만남에 진심이라는 점은 최근 경주 방문 때도 드러났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대화하기 위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빈말이 아닐 것이다.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은 사기의 문제다.

다만 7년 전과 달라진 것은 김정은의 위상이다.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다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수모를 당했던 김정은은 이후 본격화된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포토’를 맞았다. 이 기회를 살려 재래식 무기 산업을 부활시켰고, 핵·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아 비약적 진전을 이뤘고, 경제 숨통을 뚫었고, 러시아·중국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김정은이 오히려 트럼프를 안달 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틸릴 수 있는 김정은과 레이덕을 막기 위해 쫓기는 트럼프’ 조합의 만남에서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한 거래, 양보 잔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건 지금 시점에선 가우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불안감이 가시질 않는다.

우정아¹의 아트 스토리 [610]

기억의 형태를 건축으로

지난주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1929~2025)가 별세했다. 20세기 말의 건축을 단 한 명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그건 게리의 몫이 될 것이다. 건물에 기본이 기둥, 보, 벽으로 이루어진 네모였다면, 게리가 만든 비정형의 평면, 뒤틀린 구조, 일렁이는 곡면,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금속성 표면은 건축의 기본 개념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게리는 자신이 건축이 아닌 조각을 한다고 했다. 건축이 기능을 담는 구조의 문제라면, 조각은 의미를 담는 형태의 문제가 된다.

루 루보 뇌건강 연구소는 라스베이거스의 사업가 래리 루보가 알츠하이머를 앓다 세상을 떠난 부친 루 루보를 기리며, 퇴행성 뇌질환의 연구 및 치료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당시 게리 또한 뇌 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는 헌팅턴병의 퇴치를 위한 연구 재단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루보에게 세 연구소에서 헌팅턴병도 다룬다면 설계를 맡겼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요동치는 형태의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를 내세운 이벤트 센터와 직사각형 상자를



프랭크 게리, 루 루보 뇌건강 연구소, 2007~2010년, 스테인리스 스틸 및 유리·스투코 혼합 구조,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모양의 의료 및 연구동으로 이루어졌고, 두 동은 정원으로 연결된다. 평론가들은 상반된 두 구역이 ‘논리적 좌뇌’와 ‘창의적 우뇌’ 같은 이분법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혹자는 여러 겹의 왜곡된 평면이 무너질 듯 혼란스레 중첩된 형상에서 환자들의 불안과 혼돈이 느껴진다고도 했다.

루 루보 연구소는 ‘기억을 살리는 재단(Keep Memory Alive)’에서 운영한다. 어쩌면 기억이란 원래부터 이처럼 명확히 이해할 수 없는 연상의 조각들이 혼란스레 뒤엉킨 무질서의 세계가 아닌가 한다.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 재판부, 법 왜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관회의는 8일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위헌성이 크다”는 전국법원장회의의 발표에 이어 일선 판사들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 사건을 맡은 1심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헌법에 없는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법 왜곡’이란 명목으로 민주당 맘에 들지 않는 판사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법관회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기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안전을 부결시켰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보조를 맞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법관회의의 반대는 이례적이다. 당초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문제는 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논의의 시급성에 비추어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 서 강하게 제기돼 상정·가결됐다고 한다. 이들이 볼 때도 민주당

의 위헌적 폭주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법관회의는 민주당이 강행하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는 법관 평가제에 대해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개편에 대해선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심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국회에 밝힌 신중론과 같은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문제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가 법원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이 논의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 조항 등 지역적인 위헌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겠다는 법안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다. 문구 일부가 아니라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지 말라.

특별감찰관, 김현지 문제, 국민 우롱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아직 공식인 것은 국회 추천이 없기 때문이지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없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곧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모든 사안에서 긴밀한 협의를 한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문제에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대선 때 공약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공언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후보 추천 요청이 없었다” “다른 현안이 너무 많다”며 연내 추진이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을 핑계를 찾으며 시간만 끄는 것이다.

KTX·SRT 경쟁도 없애, 모든 노동개혁이 거꾸로 퇴행

정부가 KTX와 SRT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이대로면 2013년 이후 약 13년 만에 다시 합쳐지게 된다. 코레일이 사실상 SR을 흡수하게 됐다. 이는 민노총과 철도 노조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경쟁 체제가 사라질 경우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철도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다. 철도 서비스를 독점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방만 경영의 폐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철도 운영 경쟁 체제가 정착됐고 국민 반응도 좋았다. SR 측은 “현재 SRT 요금이 KTX보다 저렴하며, 지난 10년간 인상 없이 국민 교통비를 약 8800억원 절감했다”며 경쟁 체제가 더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해 왔다. 그 성과로 이재명 정부가 노조 민원 해결 차원에서 단번에 없애겠다는 것이다.

철도 통합은 그동안 민노총의 핵심 사업장인 철도노조가 파

업을 하며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이다. 노조 등 철밥통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경쟁이다. 경쟁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지 노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경쟁 체제에선 한쪽이 파업하더라도 다른 쪽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민노총엔 눈엣가시 같은 문제였다. 철도가 합쳐질 경우 파업을 하면 대안도 없게 된다.

주요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철도 민영화 또는 경쟁 체제가 대세다. 일본은 전국 단일 체계로 운영해 온 국철을 6개 여객 회사, 1개 화물 회사로 분할 민영화한 지 오래고, 유럽도 개방형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해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 문제에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어렵사리 이뤄온 작은 노동 개혁 성과조차 다 되돌리고 있다.

국민의힘,
개혁이나 수구나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개혁 중 … 장동혁에 힘 실어줄 때

뉴데일리
newdaily.co.kr

한동훈-이준석 세력의 장동혁 발목 잡기 | 민심은 뒤흔, 중도는 또 뭘가 … 애매모호 | 당원이 주인인 정당 만든다는데 … 뭐가 문제?

◆국힘, 풀뿌리 중심 개혁의 갈림길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대한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 쪽에는 **〈당원 중심 정당·자유 우파 가치 중심 정당〉**으로의 한글탈태를 내세운 **〈개혁세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금בע지 중심의 기득권 수구세력〉**이 있다. 지금 국힘은 이 두 세력 간의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당원 중심 개혁은 **장동혁** 대표와 지방선거총괄 기획단장 **나경원** 의원 등을 축으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아래 추진되고 있다. 국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참여 위원 85.4%의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소속 국회 의원·단체장·지방의원들이 당의 철학과 노선을 충실히 실천했는지 평가하고, 공천 심사에 직접 반영하는 기구다.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당원 주권 정당〉**으로의 체질 변화이다.

◆‘계엄 사과’에 명확히 선 국다

이에 반발하는 쪽은 **〈개념조차 모호한 ‘민심’〉**을 앞세워 계엄을 들고 있다. **한동훈·이준석 세력**을 비롯, 기득권 정치인들이다. 당 차원의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이 본격화될수록 그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금בע지 정치권의 인식〉**과 **〈국힘 당원 지지 국민의 인식〉**이 얼마나 큰 괴리를 보이는지를, 계엄 1주년 여



◀ 당원이 주인이고 중심인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개혁을 밀어붙이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 챗GPT

론조사가 극명하게 보여줬다. 리서치뷰 조사에서 “국힘이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하는냐”는 질문에 국힘 지지층의 74.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사과해야 한다’는 21.5%. 4명 중 3명이 ‘반대’이다.

그럼에도 **집권 강성 좌의세력**, 후방벽 역할의 **국과 탄핵 부역 세력**, **한동훈·이준석**을 **〈보수의 희망〉**으로 띄운 **〈중도팔이 기회주의 세력〉**들은 계엄 1주년에 대대적인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 국힘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았다.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세력들

한동훈·이준석을 축으로 한 **탄핵 찬성 세력과 국힘 개혁 반대 세력**은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정치학자 출신 김민천 국힘 의원은 이를 비판했다.

“당원 중심 개혁에 불만인 자들이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비대위 전환 운운하지만, 이미 자각한 당원들의 존재를 무시한 발상이다. 12.3의 중요한 결과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성과 자발성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엘리트 중심 정당에서 벗어나 **자각된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 시민은 12월 4일자 뉴데일리 기사 **〈與 ‘내란몰이’ 힘 빠졌는데… 아직도 ‘사과’에 발목 묶인 국힘〉**(황지희 기자)을 SNS에 공유하며 이렇게 적었다.

“모든 레거시 미디어가 사과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 정치적 편향이 달한 기사를 낸 곳은 사실상 뉴데일리 하나뿐이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하다.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힘을 더불어파쇼당의 2중대로 만드는 것이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퇴장할 것인가

문제는 이제 하나다. 개혁을 밀어붙이는 **장동혁·나경원·정희용·이만희·김민천** 의원과 **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 정치인〉**들이 또 한 번 당을 장악할 것인가.

문재인·이재명 좌의 정권에서는 침묵하고 **박근혜·윤석열 비좌파 정권**에서는 칼을 휘둘러온 탄핵 부역 세력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퇴장될 거라고 본다. 이들 명단이 이미 회자되고 있다. 그들은 **박근혜 탄핵 당시** 탈·복당을 반복하다 몰락한 김무성·유승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반면 **장동혁·나경원·김민수·정희용·이만희·김민천·김재원** 등은 악의적 가스라이팅과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들의 정치적 기반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

◆장동혁은 DJ가 아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미뤄왔

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지도부 장악력 강화를 통해 내부 흔들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새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호선** 신임 당무감사위원장(국민대 법대 학장)처럼 자유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결기 있는 인사가 적임이다.

장동혁의 가장 강력한 정치 자산은 당원과 자유 우파 성향 시민들의 지지다. 이 지지를 잃는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는 하룻밤 사이 말을 바꿔도 **〈문지마 지지층〉**이 따라주는 **김대중**과는 전혀 다르다.

국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표는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장동혁을 지키기 위해 입당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청년 우파와 시민단체들도 **장동혁**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탄핵 부역 세력의 **〈장동혁 끌어내리기〉**가 성공, **김종인**이나 **한동훈·이준석**이 다시 당권을 장악한다면, 국힘은 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힘과 자유 시민 사회는 **장동혁**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뉴데일리 온라인판 기사를 챗GPT가 지면용으로 축약했습니다.]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2월 7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86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